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 검찰 결론

이병모 구속영장에 '다스는 MB소유' 명시... 강경호 "MB 지시 받아 다스 사장에 취임"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4일 이병모 চে임제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을 못박았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에 깊숙히 개입해 'MB 재산 관리인'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무국장에게 대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과거 특검 진술 내용을 뒤집는 진술을 쏟아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사무국장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국장 뿐만 아니라 강경호 다스 사장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다스를 운영해 온 최고경영자이지만, 정작 자신은 실권이 없었으며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찾은 민평당

2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조배숙 대표(오른쪽 2번째), 장병원 원내대표(오른쪽 3번째), 김경진 최고위원(왼쪽) 등 당 지도부가 셋다운(shutdown)이 예고된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찾아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공장 폐쇄 특별대책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여러차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강 사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 BBK투자 과정 등까지 자세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면, 이 자금으로 투자한 BBK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저울질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관측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검찰 사장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 대거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수사가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깊이 고민 중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저울질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관측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검찰 사장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 대거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수사가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깊이 고민 중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

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은 개헌안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정책기획위원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산하 기구를 두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짧지만 긴급국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이 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자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방향을 다룬다.

문 대통령은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다.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면서 "우리의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

김관영 의원 민생 입법 성적표 '맑음'

폼수 세테크 방지법 ·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법 통과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법')과 국유재산법이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법 모두 생활밀착형 민생법안들이라는 평가다.

이날 통과된 국유 재산법 개정안은 세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물납제도 개선이 골자다.

물납제도로 납세자가 세금을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보호제도의 하나다. 그동안 물납 후 국유재산이 된 증권, 부동산들은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매수해 사실상 납부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논란이 있었다.

동법 개정으로 물납 후 저가 매입 금지 대상의 범위를 현행 본인 등에서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또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사용이 중지된 계좌의 주인이 해당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져도 상당기간 이용중지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허위신고로 확인된 중지계좌 정보를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여진다.

김 의원은 "모든 법과 제도가 제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아도 틈새를 노린 폼수와 2차 피해자들이 적지 않아 항상 보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꼼꼼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6.2%... 3.1%p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2일 66.2%를 기록하며 지지율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는 이날 tbs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중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6.2%로 지난주 공식 주간집계 대비 3.1%p가 올랐다고 밝혔다. 조사 오차 범위 ±2.5%p 이상의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설 연휴 정치 담론 활성화, 평창동계올림픽 흥행, 야당의 약세가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 조건"이라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대비 4.6%p 오른 50.5%로 대폭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19.0%, 바른미래당은 7.4%였다. 정의당은 4.9%, 민주평화당은 2.9%를 보였다. /뉴스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 완료

김광수 의원 간사 선임 · 현역 7명 총 15명... 27일 '촛불혁명승리를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 천정배, 이하 '헌정특위') 구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평화당 헌정특위는 21일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김광수 국회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운영일, 최경환, 이용주, 정인화, 박주현 의원(이상 국회의원), 홍성문 · 홍흔희 · 박재순 · 부좌현 · 송백석(이상 지역위원장) · 윤재민(대구대 법대 교수) · 하주아(광주시 남구 의원) · 안효준(전 국민의당 서울시장 대학생위원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평화당 헌정특위는 27일 오전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평화당의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당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촛불혁명승리를 위한 개헌과제'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정배 위원장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혁명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민주평화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입장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다"고 말하고, 또한 "국회 헌정특위에 민

주평화당 특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사로 선임된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거대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선거 법적 절차가 혼란에 빠진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